

까다로운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유명무실’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사회 적응·자립 위해 국비 500만원 지원 미성년자로 입소·입소 후 1년 지나 퇴소 등 조건 현실과 동떨어져 광주·전남 5년간 108명 중 4명 지급 ... 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 필요

광주·전남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정부 자립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데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상반기) 광주·전남 성폭력 피해자들 중 정부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는 4명뿐이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들의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적응 및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5년새 보호시설 퇴소자는 총 47명에 달하지만 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은 미성년 피해자는 3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보호시설 퇴소자는 총 61명에 달했지만 한 명만 지원금을 받았다. 광주·전남을 통틀어 보호시설 퇴소자 중 3.7%만 지원금을 받았다. 1년에 한명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힘든 이유는 지급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립지원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최근 5년간 광주 소재의 보호시설 퇴소자 47명 중 미성년 입소자는 8명이었고 전남은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이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친권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시설퇴소 후 재발방지를 위해 분리 조치와 자립지원이 필요하지만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각자대도 발생하고 있다. 성년 입소자가 지원대

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점도 문제다.

또 너무 어린 나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최대 입소기간인 2년을 모두 채우더라도 만 19세 이상 퇴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맹점도 있다.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판단받은 경우 최대 2년까지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3개월이다. 대부분은 한달에서 1년 사이 퇴소하게 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보호시설에 머무르기보다는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원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인 인천 지역은 정부 지원금 외에 지자체 차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경 광주 여성민우회 대표는 “보호시설을 찾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돌아갈 집이 없거나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다”며 “정신적인 치유 뿐만 아니라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자립지원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미성년자라도 다른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은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퇴소 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립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들만을 위한 전담 보호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매년 입소인원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자립지원금 지급 조건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광주시 남·북구, 전남도 목포·여수 각각 2곳씩 운영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머물 수 있는 장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시설과 장애인시설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병용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별도 시설은 아직 없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책 향기 가득한 ‘책 축제’ 즐거요

제9회 책향기 서구 책 축제가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하정용미술관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북캠프 존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제적인 이유로 다투다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자수

60대 가장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와 다투다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15일 광주경찰청에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 오전 7시 30분께 주거지인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후반의 아내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던 이들 부부는 최근 1억 7000만원 가량의 빚을 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주 다투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 중에 홧김에 아내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약 40분 뒤인 오전 8시 10분께 경찰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달인 기자 kdi@kwangju.co.kr

고급 외제차 피해차량 둔갑 보험금 타낸 일당 10명 적발

고급 외제차를 교통사고 피해차량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남부경찰청은 15일 A(39)씨 등 10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시 남·서구 일대에서 자신의 소유인 고급외제차를 공범들에게 들이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 93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 직원인 A씨는 “보험금을 일부 나눠주겠다”며 지인 9명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보험사 출동기사 등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가 수입차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 비용·시간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합의를 유도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차량에 유사 사고가 계속 이어진 점과 보험사 직원 등이 가해차량 운전자인 점을 포착해 범행을 밝혀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 중앙공원 주주권 소송 케이앤지스틸 승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의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빚고을중앙공원개발(빚고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이 빚고을중앙공원 24%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빚고을 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

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엔 21%이 출자해 빚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2020년 4월 광주시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한양파와 비한양파로 나뉘어 갈등이 이어졌다.

한양파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빚고을 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지난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풀을

선(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 지분을 49%의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다.

케이앤지스틸은 이에 맞서 자신들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빚고을 측에 명의개서를 이행하라는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한양파인 빚고을SPC와 우빈산업 측은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빚고을 측에 의해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선순위 채권인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하면 최대주주권을 롯데건설이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 참사’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비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30대 여성 경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원)은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학동 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합장을 연임한 조합장 B씨 등은 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2018년 학동 3구역의 ‘보류지(보류지)를 쟁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보류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

를 남겨놓는 것으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등을 거쳐야 함에도 B씨 등은 아무런 절차없이 무상으로 보류지를 받은 것이다.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7년 조합장 등 2명에게 무상 지급된 보류지를 정상 분양한 것처럼 분양 공고문을 수정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위조된 홈페이지 화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관계자와 나눈 문자메세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고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